

# 불법행위 등 신고보상금 상한 폐지 공직사회 입찰 비리 실태조사 추진

## 국민권익위 하반기 역점 과제

삶의 질 개선 등 4대 과제 집중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신설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 만들 것”

앞으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국민이 받는 보상금의 30억 원 상한선이 전격 폐지된다. 또한 하반기 중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입찰비리와 수당 부당지급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가 이뤄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하반기 정책방향을 ▲권익 보호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대 역점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과격적인 보상 대책이다. 권익위는 오는 9월부터 부패행위와 498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수입회복액의 30%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상금 상한액 30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권익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억 원 기준도 아예 폐지해 신고에 따른 보상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의 반칙과 특권에 대응하기 위한 사정 고베도 죄어맨다. 권익위는 하반기에 입찰비리, 수당 부당지급 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구조적 부패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8월에, 부정청탁 공직자 제재 강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9월에 각각 국회에 제출한다.

장기화된 민생 고충과 집단 갈등 해결에도 속도를 낸다. 권익위는 이달 발표한 '집단 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반기 중 집단민원 130건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원행정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도 확대해 하반기 중 74회를 운영하며, 행정심판 청구 전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도 시행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성 확보 조치도 이어진다. 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청년 정책 패널'을 신설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하반기 중 지난해 채용 실적이 있는 공직유관단체 1500여 개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과감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 1년간 청년세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을 집중 분석해 병역, 취업, 주거, 육아 등 청년의 정책 수요와 민원제기 유형을 7월 중 파악한다. 청와대 누리집과 연계한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도 7월에 신설해 정책 제안의 정책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더 민생 현장으로 자주 나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송상근(가운데)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해운·항만 부문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BPA

## BPA, 해운·항만 부문 창업기업 지원 강화

### ‘1876 부산’ 입주기업 대상 간담회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운·항만 부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해운항만 창업지원 플랫폼인 '1876 부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앞두고 지난 15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876 부산'은 해운·항만·물류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의체다.

간담회에는 부산항만공사의 송상근 사장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안병길 사장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입주기업들은 개발

기술 실증 및 시제품 보관 공간 확보 등의 현실적인 지원 문제와 부산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협조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BPA는 중소기업의 기술 등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기술 실증을 상시 지원하는 시험무대를 소개했다. 또 부산지역 창업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은 각 기관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송상근 사장은 "창업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업 확대를 통해 '1876 부산'을 동남권을 대표하는 해양 창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AI 역량 높인다

### 2개월간 'NH AI 권역별 교육' 실시

농협중앙회가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NH AI(인공지능)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이 교육은 농축협 임직원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업무혁신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은 농축협 임직원 약 700명을 대상으로 총 24기수 규모로 운영되며, 전국 12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는 권역별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지역본부별로 1~3기수를 편성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AI 활용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AI 활용 실무 문서 작성 ▲AI 기반 제안서 작성 ▲데이터 수집·분석 등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해 보고서 작성, 자료 분석 등 현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활용법을 익히게 된다.

교육 첫날인 지난 14일에는 충남세종지역본부와 경남지역본부에서 'AI 활용 실무문서 작성' 과정을 선보였다. 이후 전국 권역으로 교육을 확대한다.

농협은 "수도권 중심의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지역본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며 "교육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디지털 역량 격차를 완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AI 실습 과정을 지속 확대해 농축협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산업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준 완화

## 신설 자회사·합작법인 대상 추가 고용·면적유지 의무 합리화 추진

앞으로 업력이 1년 미만인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도 지방 투자를 할 때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에 보유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과 면적을 무조건 유지해야 했던 과도한 규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일부를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탓에 정착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법인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사업장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으나, 앞으로는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고용·면적 유지 의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 사업

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만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산 장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채울 경우 보조금 지원비율을 2%포인트 우대해 준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범위에서 빠져 있었던 중고 장비 구입비용도 앞으로는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7월 20일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들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기후부, '자연·허수 발전사업' 퇴출

### 가동 준비된 사업자에 전력망 배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한정된 전력망 접속 용량만 장기간 선점해 온 '자연·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퇴출 절차가 시작된다. 호남권 등 전력 계통이 심각하게 부족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파를 독점하던 유명 사업자들을 쫓아내고, 실제 가동이 준비된 진성 사업자에게 전력망을 돌려

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해왔다. 이 때문에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신청 단계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는 사업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

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신청 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점검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용규정 등 세부 개정 내용은 한전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9월까지 기존 관리망 밖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를 대상으로 사업진척도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농어촌공사, '청년농업인 성공사례' 시상

### 최우수상 장선미, 우수상 남궁은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을 이룬 '청년농업인 성공 사례'를 발굴·시상했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청년농 장선미 씨는 '맞춤형농지지원'으로 원료생산 기반을 마련해 토종 허브를 활용한 화장품 브랜드 '아로마로아'를 창업했다. 장 씨는 농지 구입 자금을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생애 첫 농지지원'을 통해 6600㎡ 규모의 농지를 확보했다. 이에 원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시제품까지 출시하게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6일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농지은행 참여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됐다.

우수상을 받은 남궁은옥 씨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서 생산한 콩으로 '콩심체이크'를 개발했다. 농협하나로마트와 이마트 팝업스토어 등에 입점했고 중화권 수출도 추진 중이다.

/세종=김연세 기자